

## 가자, 지식재산 강국 시대로

“부(富)의 수단이던 지식과 정보가 부(富)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청년회의소가 ‘신기술과 지식재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9차 미래경제포럼에서 특허청 김중갑 청장이 한 말이다. 김청장은 이날 포럼을 통해 지식재산강국의 실천전략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 지식 기반 사회, 지식재산권이 핵심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화가 급속히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전통산업도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는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는 ‘인간의 과학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소산물에 허락되는 법적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은 이에 따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모든 WTO 회원국은 TRIPs 규정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규범 정립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출원은 2003년도 306건으로 중국(707건), 미국(621건), 일본(584건) 다음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어 2004년도에는 내국인의 WIPO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7위를 기록, 내국인의 미국특허청 출원 건수는 세계 5위에 올랐다. 또한 세계에서 10번째로 선진국 특허청의 상징인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1억 2백만건의 특허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급,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 세계수준의 특허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5% 증가해 특허출원 급증, 심사물량 적체로 심사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동안 특허 행정의 전산화,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출원량의 증가에 미치지 못한 인력증원으로 심사대기기간이 단

축된 데에 따른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심사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관 업무 부담으로 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조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여도가 저조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대학은 박사급 연구 인력의 72.1%를 보유하고 국가 R&D 투자의 10%를 사용하는 데 비해 특허출원은 0.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은 박사급 인력의 13.0%를 보유하고 국가 R&D 투자의 14%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허출원은 2.9%에 그쳤다. 이는 연구업적 평가 시 논문에 비해 특허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과 특허기술 사업화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다.

### 지식강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국가 간 치열한 신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질 높은 지식재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7가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지식강국 실현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부여로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먼저, 특허 심사 및 심판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2006년 말까지 세계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통한 상표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해 상표와 디자인 분야 심사대기기간을 2006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6개월로 단축한다.

축적된 특허정보의 활용 촉진도 요구된다. 정부기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과제선정 등의 추진과정에 특허정보 활용을 적극 유도



해 중북투자 방지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 및 연구소에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지도(patent map)를 제작, 보급하고 특허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특허기술정보를 제공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른 민원서비스의 품질과

속도를 개선하고 특허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999년에 개통한 특허넷(KIPOnet)을 발전시킨 'KIPOnet 2'를 개발,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한국 특허기술표준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 통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범국민적 지식재산 창출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와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특허기술 거래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게 특허기술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는 특허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WIPO와의 협력을 강화해 특허행정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자 간 협력에 대응해 적극적인 지식재산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말레이시아, 2004년 싱가포르

에 이어 올해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특허권의 무심사 등록 대상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관련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소송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사건의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관할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기술혁명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도전임과 동시에 도약의 기회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지식재산권에는 둔감했던 것이 우리나라 특허권의 현주소이다. 이에 특허청은 발명특허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식재산의 효과적 창출과 보호, 활용을 통해 2007년까지 6대 지식재산 강국의 위치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래 사회를 이끄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식재산보호 실천정책을 발휘해야 할 때다.